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3월 8일은 111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

01 주요 내용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
 -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
 -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 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 로 공식화함으로써 기념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관련 행사를 해오고 있음
- 2019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로 최근 발생한 미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관한 부문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편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세계 성 격차 지수(GG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650점으로 지난해보다 2계단 떨어진 118위를 기록
 - 우리나라는 유사업무 임금성비, 전문직, 장관비율, 국가수장 재직기간에서 순위가 올랐으며, 추징소득,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출생성비, 국회의원 비율에서 순위가 하락

*GGI(Gender Gap Index)는 세계경제포럼이 내년 각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김. 지수가 '1'이면 완전평등을 의미

2017 세계성평등지수 (1-10위)				2017 한국 성평등지수	
1	아이슬란드	0.8594	6	니카라과	0.7894
2	핀란드	0.8453	7	르완다	0.7854
3	노르웨이	0.8374	8	아일랜드	0.7850
4	스웨덴	0.8165	9	필리핀	0.7814
5	덴마크	0.8025	10	벨기에	0.7809

 117위 전체 (총 142개국)	경제참여와 기회	124위
	교육성취도	103위
	건강과 생존	74위
	정치권한 부여	93위

자료 :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여성의 경제적 법적 평등 지수(WBL100)**' 에서도 우리나라는 85.00의 남녀 평등 지수로 콜롬비아와 함께 공동 57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 출산, 가정 폭력, 자산 관리권 등 사법 제도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특히 급여, 출산, 사업경영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World Bank Group(2019).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9.

02 시사점

-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추진 필요
 - 가장 불평등한 부분 중 하나인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독박육아' 극복을 위한 남녀 일·가정 양립 실천 등을 위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제를 마련하여 저출산 및 성불평 문제를 해소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합의

01 주요 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월 5일(화),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
-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 소득이 중위 이하인 저소득층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다시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했다 실직하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폐업한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이 주된 보호 대상이 될 전망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나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은 제외
 - 지원액은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받는 정액급여*로, 6개월간 지급
-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나 국회 법제화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

〈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관련 합의문 내용

- 2-1.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
- 2-2. 실업부조는 연령·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도록 법제화한다.
-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지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한다.
- 2-4.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실업부조 도입과 더불어 고용보험 제도의 내실화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합의
 - 현재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해 높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임금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급여 사업’에 고용보험기금만이 아닌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
 - 고용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 수(2014년 기준 605.5명)도 선진국 수준(독일 44.8명, 영국 22.3명, 프랑스 88.6명, 일본 90.4명)으로 개선
-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복지선진국의 실업부조와 비교해볼 때, ** 한국형 실업부조는 급여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도 낮아 실업부조의 개념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주근복지동향
163호(2018.7.26.)
해오동향 참고

02 시사점

- 실업부조의 주요 대상은 청년으로, 여타 청년정책 대상자와의 중복(급여)가 우려되며, 급여 수준 및 기간 등 조건이 더 좋은 실업부조로 대상자가 집중되면서 기존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성평등 지수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지역별 양성평등 수준을 살펴봄

- 지역성평등 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에 근거한 3개 영역 8개 분야의 지표로 구성
 -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 및 문화로 구분
- 지역별 지수 산출 결과, 2017년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Level-1)은 강원, 대전, 서울, 전북
 - 중상위 지역은 광주, 대구, 부산, 제주이며, 중하위 지역은 경기도, 경남, 인천, 충북이 해당
 - 성평등 하위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으로 나타남

〈표〉 지역별 성평등지수

지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전국	71.1	28.2	94.6	87.3	96.5	70.8	78.0	89.3
서울	74.4	40.0	96.0	89.7	99.0	61.2	78.9	88.7
부산	70.9	28.2	94.9	88.5	96.9	78.9	71.4	90.9
대구	73.5	30.4	95.0	87.0	98.4	78.1	68.1	88.7
인천	69.4	30.7	95.4	86.0	98.1	69.2	75.6	91.9
광주	70.6	36.5	94.8	88.8	98.9	73.3	69.3	89.2
대전	72.6	39.2	94.8	90.1	98.4	68.8	78.2	93.1
울산	59.9	31.0	95.8	83.4	95.0	71.0	80.1	90.3
경기	70.5	29.7	95.4	86.4	98.1	68.8	77.0	91.5
강원	75.9	27.7	92.2	92.8	98.1	70.0	80.5	83.8
충북	74.4	25.9	93.2	87.7	97.1	65.0	71.9	88.4
충남	70.3	23.3	92.6	81.9	96.7	67.3	79.8	85.4
전북	73.8	24.2	92.4	88.0	96.5	91.1	78.5	85.2
전남	69.1	20.8	90.3	85.4	96.5	81.9	78.7	82.4
경북	67.7	20.5	91.8	81.0	96.5	76.5	75.9	86.2
경남	66.6	24.0	93.4	84.1	96.3	78.1	79.7	89.9
제주	77.5	30.5	93.2	92.9	97.5	64.7	77.5	85.7

-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은 사회참여 영역에서 소폭 개선되어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은 지체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또한 낮은 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복지 분야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개선을 위해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이 필요

〈표〉 경기도의 분야별 지표 점수와 순위

분야별	점수	순위	전년 대비 증감
경제활동	70.5	10	▲
의사결정	29.7	8	▲
교육·직업훈련	95.4	3	-
복지	86.4	10	▲
보건	98.1	6	▲
안전	68.8	12	▲
가족	77.0	10	▲
문화·정보	91.5	3	▲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의회-경기도 -복지재단 간 제3차 정책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 2019. 3.8.(금), 10:30~13:00/경기교총회관 2층 소연회장 참석대상 : 30명(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 관련 공무원, 재단 직원 등) 내 용 : 복지기술의 적용 및 발전방향 논의 문 의 :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267-9364)

03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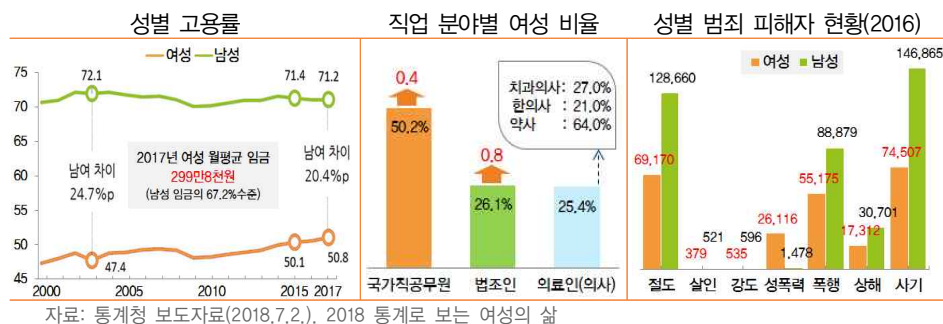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은 어떤 의미인가?

-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고 발표
 - 달러 기준으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인면서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 중 하나로, 한국이 30-50클럽 국가가 됐다는 것은, 경제의 양적 기준뿐 아니라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의미
-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은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존재
 - 1인당 GNI에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소득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하며 기업과 정부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
 -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1%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0.1%) 이후 최저
- 소득수준은 선진국 클럽에 근접했지만, 복지·노동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은 낮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도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
 - 7개국의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평균)인 반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2017년)로 평균보다 크게 높고,
 -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7개국의 3만 달러 시기(20.7%)의 절반에 불과한 11.1%
 - '지니계수 개선율'의 경우 7개국은 3만 달러 당시 31.5%인 반면, 한국은 12.6%(2017년)에 그침
-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장 및 생산성 제고를 지속하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질적 성장'도 필요

*관련기사:
한겨레 3.6일자
기사

04 통계로 보는 복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단위 :
1,2) %, 3) 명

-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이며,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4%p까지 감소
 - 2017년 여성 월평균 임금은 229만8천원으로 남성 임금의 67.2% 수준
-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여성 법조인은 26.1%로 전년보다 0.8%p 증가
-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으며, 다른 범죄는 남성이 많음